

## ‘여름보다 큰 위력’ 가을 태풍... “각별한 주의 필요”

30년간 ‘한반도 영향’ 태풍 중 가을 발생은 25% 불과  
피해 여름보다 훨씬 커...“높은 해수온·기압골 영향”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이 북상 중인 가운데 역대 가을 태풍이 여름보다도 맹위를 떨쳐 광주·전남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던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국가태풍센터와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0년(1989~2019년)간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발생,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107개였다.  
이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27개의 태풍이

가을인 9월(23개)과 10월(4개)에 발생했다.  
여름철(6~8월)은 총 79개(7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큰 피해를 남긴 태풍은 가을에 집중돼 있다.  
재산 피해금액이 가장 컸던 태풍 1·2위는 2002년 루사(RUSA·8월30일~9월1일)와 2003년 매미(MAEMI·9월12~13일)였다.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태풍 11개 중 7개가 가을 태풍이었다.

가을 태풍은 광주·전남에도 맹위를 떨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13호 링링(LINGLING), 17호 타파(TAPAH), 18호 미탁(MITAG) 등이 잇따라 큰 생재해를 남겼다.  
링링(9월2~8일)에 따른 피해 규모는 101억 원으로 집계됐다. 타파(9월19~23일)는 재산 피해는 11억 원으로 크지 않았지만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미탁(9월28일~10월3일)은 100억 원대 피해를 야기했다. 김 채묘시설 피해가 컸던 해남·진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2012년 산바(SANBA·9월15~17일)는 322억4700여만 원의 피해를 남겼다.

앞서 2010년에는 콘파스(KOPASU)가 9월 1일부터 같은달 3일까지 신안·무안 등 전남 서남해안에 위력을 떨치며 69억6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2016년 차바(CHABA)도 10월3일부터 나흘동안 전남 지역에만 67억47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가을 태풍의 피해가 큰 이유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 ▲북태평양 고기압 약화 등이 꼽히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 장기화 영향으로 서·남해상 수온이 낮아졌고, 북상하는 태풍이 ‘고온 수증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비구름대가 커진다고 기상청은 분석했다.

또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약화되면서 기압골의 가장자리를 타고 태풍이 한반도로 향하는 ‘통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름 태풍보다 한반도 내륙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 관계자는 “가을 태풍은 수에 비해 피해 규모 면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다”면서 “해수면 온도가 가장 높아진 9월 들어 수증기 유입이 늘고, 기압골 변화로 인해 가을철에 태풍이 강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풍 기상예보에 늘 관심을 갖고 사전에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호 기자



전남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에 '코로나19' 이동 선별진료소 운영.

## 당정청 “어려운 국민 돕기로...피해 큰 계층 맞춤형 지원”

“청년·고용취약층·소상공인·자영업 중심”  
“빚내 쓰는 추경 효율적...불공정 없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적 ‘맞춤형’ 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2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자 한다”며 “청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수혜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결정된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정책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차 추경의 특징으로 전액 국제로 충당하는 것과 유동적 코로나 상황을 지극한 뒤 “그렇기 때문에 빚을 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커졌다는 점”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당정청은 몇 차례 실무협의 끝에 어려운 국민을 돕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 ‘주춤’

전남지역에서 3일 연속 지역감염이 없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이날 오전 8시 현재 전남 해의 유입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총 159명이 감염됐다.  
하지만, 지난 3일 밤 순천 60대 여성(전남 156번) 이후 3일 연속 지역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5명에 이어 4명→3명→3명→6명→1명 등 감염자가 한자릿수로 내려 앉은 뒤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지역 확진자가 없다.  
이는 3단계 수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강영규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으로 대유행 우려가 있었으나, 강력하고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해 현재는 다소 진정국면이다”며 “완전한 차단을 위해 방심하지 않고 집 안에만 머물기를 비롯 항상 마스크 쓰기, 사람 간 접촉 최소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은 지난 8월 한달간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가 103명 늘었고, 특히 광복절 이후 17일부터 31일까지 102명이 집중 발생하는 등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군과 함께 접촉자 신속 파악 및 진단검사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합 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피해와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청년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민생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금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민생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추경은 신속성·효율성·정확성을 갖고 적재적소에 짜임새 있게 투입돼야 한다”며 “코로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지원인 만큼, 예산이 신속 지원되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한다. 국회에서도 4차 추경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야당과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  
추석 민생대책과 함께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이동 자제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총리는 “국민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도록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빈틈없는 방역대책 ▲교통대책 ▲추석 성수품 공급 및 체불임금 청산 ▲전통시장 수요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을 열거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에게 하나 걱정 있어서 부탁을 드린다. 이번 추석에 대이동이 있다면 다시 코로나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며 “여러 사정과 생각이 있겠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수성향 단체들의 개전절 광화문 집회 예고에 대해 “방역 방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아래 단호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